남북한과 중국·대만의 동시 평화통일 가능성과 추진전략:
동일 전구(戰區)내 지정학 연계론을 바탕으로

정경영(한국통일국제워킹그룹, 前 한양대)

이 글은 서해를 끼고 있는 동일 전구(戰區)내 지정학 연계론을 바탕으로 남북한과 중국·대만의 동시 평화통일 가능성과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한반도와 중국·대만의 통일 당위성과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또한 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영구적인 분단비용 보다 통일이 실현되었을 때의 전략적 편익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통일은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

한민족과 중화민족은 분단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다. 통일의 경로에는 무력통일과 평화통일이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선제공격에 의한 무력통일을 시도하든, 중국이 항공모함 등을 투입하여 대만 포위 점령을 시도하든, 서해를 끼고 있는 동일 전구(戰區)의 특성상 한반도 또는 대만 전쟁이 지역전쟁으로 비화되며, 전력구조상 어느 일방의 승리를 담보할 수 없고 공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정학적 연동성으로 인해 남북한 또는 중국·대만 중 어느 한쪽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더라도, 이는 다른 한쪽에 통일 조급증을 자극하여 무력통일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먼저 통일을 이룬 지역마저 지정학적 전이(spillover)로 다시 내란에 휩싸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무력통일이나 남북한-중국·대만 시차적 평화통일 경로는 완전한 통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한-중국·대만의 동시 평화통일 경로를 진지하게 탐색하게 된 배경이다.

연구 가설

(1) 남북한 또는 중국·대만의 무력에 의한 통일 시도는 서해를 끼고 있는 동일 전구(戰區)의 지정학적 특성상 상호 연동되고 타 지역 전쟁으로 비화되어 통일도 못하고 파멸적 공멸을 자초할 것이다.
(2)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연계성으로 인해 남북한 또는 중국·대만 중 어느 한쪽이 먼저 평화통일을 이루었을 때 타 지역에 통일 조급증을 유발하여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 있고, 이미 통일을 한 지역에 다시 내란을 유인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이러한 일련의 남북한 통일과 중국·대만 통일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간파할 때 남북한과 중국·대만의 완전하고 지속 가능한 통일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책은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일 것이다.

이러한 전략인식 하에 이 글은 한반도와 중국·대만 통일의 당위성과 문명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한반도가 분단된지 80년이 지났는데도 왜 통일을 못했는지, 하나의 중국을 표방해 온 중국이 왜 대만을 통일하지 못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일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어서 한반도 및 중국·대만의 무력통일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 최종상태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이 최선의 방책임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 EAI 2026

I. 통일의 당위성과 문명사적 의미

남북한과 중국·대만이 통일을 실현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명백하다.

첫째,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사상으로 건국하여 5천여 년 동안 함께 살아온 한민족공동체는 헤어질 수 없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는 통일되어 한민족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중국과 대만 역시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을 바탕으로 통일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왔다. 역사적·법적으로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며 양안 주민은 모두 같은 중화민족이다. 1895년 청일전쟁 이후 50년간 일본 식민통치의 고통을 겪었고, 국공내전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분단이 지속된 만큼 이를 바로잡는 것이 역사의 순리이다.

둘째, 통일은 인도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현재 남북한 인구는 약 7,912만 명(한국 5,282만, 북한 2,630만), 중국·대만 인구는 약 14억 3,933만 명(중국 14억 1,604만, 대만 2,329만)에 달한다.[1] 한국의 천만 이산가족, 8만 2천여 명의 국군포로,[2] 3만 4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단절의 고통을 시급히 종식해야 한다. 중국은 대만의 명말·청시기에 퓨젠성, 광동성 등지에서 이주해 온 본성인(85%), 1949년 국공내전 이후 대만으로 이주한 외성인 후손(13%)과 원주민(2%)[3]이 대립을 넘어 중국 본토와 하나로 융합되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절실하다.

---

[1]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World Factbook 2025-2026* (Washington, D.C: Skyhorse Publishing, 2025), p.499.

[2] "6.25 전쟁/국군 포로," https://namu.wiki/w/6.25%2.0 전쟁/국군%2.0 포로, (검색일: 2026. 7. 7): UNC 에 따르면 6.25 전쟁 시 국군 포로는 8 만 2 천여 명이었다. 정전협정 후 한국과 UN 군은 3 만여 명의 북한군 포로를 송환했으나 북한은 포로 교환 때 8,726 명 국군 포로만 송환하였다.

[3] "대만," https://namu.wiki/w/대만 (검색일: 2026. 7. 7).

ⓒ EAI 2026

셋째, 전쟁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통일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강대강(强對强) 대치로 치닫는 한, 제2의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46만여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한민족 349만[한국 161만, 북한 188만], 미군 13만, 중국군 95만)된 6·25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표 1〉 6·25전쟁 피해

국가		전사·사망	부상	포로·행방불명
한국	군인	137,899	450,742	32,838
	주민	사망 244,663+ 학살128,936	229,625	납치 303,212 + 행불 84,532
유엔군	군인	37,901 (미군 33,643)	103,460 (미군 92,134)	포로 21,700 + 행불 9,767 (미군 3,737)
북한	군인	522,000	177,000	102,000
	주민	282,000		796,000
중공군		148,600	798,400	3,900
총계	4,466,625	1,353,399	1,759,277	1,353,949

출처: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4)

아울러 잦은 중국 전투기의 대만해협 중간선 침입으로 양안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수시로 항모를 전개하여 대만을 포위하는 무력시위로 미·중,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끊이지 않고

ⓒ EAI 2026

있다. 출격한 대만 전투기와 중간선을 침입한 중국 전투기가 무력 충돌을 하거나, 대규모 무력시위를 한 중국군과 출격 출항한 미·일 전투기 및 군함과 동중국해 일대에서 충돌시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없는 상황이다.[4]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필수불가결하다.

〈 표2 〉 중국 내전 (국공내전 1945~1949) 피해 현황

구분	중화민국(국민정부군)	중국공산당(인민해방군)	민간인
주요 지도자	장제스	마오쩌둥	
병력 손실 (사상·포로 등)	800만 명 (전사상자·투항·포로)	130만 ~ 150만 명	
인명 피해 규모	-	-	250만 ~ 500만 명 사망
총계	-	-	1,200만 ~ 1,450만 명

출처: 국공내전 사상자 및 병력 손실, 국공 내전 문서 및 관련 역사 문헌, 민간인 피해, 현대 중국사 연구 및 전후 피해 보고서 종합.

넷째,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은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다. 대한민국은 2021년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역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등극하였으며[5] 입법-행정-사법부-시민사회의 견제와 균형, 인간의 존엄성, 종교와 언론의 자유, 사적 재산의 추구, 자유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 선진국, 반도체, 제철,

[4] Richard C. Bush, 박행용·이용빈 옮김, 『벼랑 끝에 선 타이완: 미중 경쟁과 양안관계의 국제정치』(파주: 한울아카데미, 2023), pp.181-211.

[5] "UN agency upgrades Korea's status to developed economy," *Koea Net*, July 5, 2021.

ⓒ EAI 2026

배터리, 조선, 자동차, 원전, K-방산의 기술 강국이자 K-컬처의 K-Pop, 드라마, 필름, 문학, 패션, 요리 등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북한 동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

중국과 대만 역시 첨단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였으나, 양안 대치로 인해 국방비에 과도하게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와 문명생활을 제약받고 있다. 양안 주민들이 소모적인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보다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다섯째, 경제 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통일을 하고자 한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전망처럼, 평화통일이 달성되면 8,000만 명의 단일 내수시장과 남한의 자본·기술, 북한의 자원·노동력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대한민국은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2050년 세계 3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6] 중국·대만도 평화통일을 일궈 내면 군비경쟁을 종식하고 거대 시장의 시너지를 통합하여 더욱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분단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주변국들은 한반도를 원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역사적 사명과 도덕적 책무가 있다. 근현대사에서 한반도는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었다. 일제의 식민통치가 없었던들, 미·소 간 일본군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한반도를 38선으로 분할하지 않았던들, 소련의 승인과 중국의 협조하에 북한이 감행한 6·25전쟁이 없었던들,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했을 때 중국군이 개입하지 않았던들 한반도가 이토록 오랜 세월 분단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와

[6]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Part I),"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Commodities and Strategy Research,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Goldman Sachs: GDP of "United Korea" Will Outpace Those of Japan, Germany, and France in 2050," *Maeil Business News*, Sep 22, 2009.

ⓒ EAI 2026

경제적·안보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주변국은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시켜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중국 역시 국공 내전 이후 고착화된 분단에서 떨쳐 일어나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한편, 평화통일한국과 평화통일중국의 출현은 동북아에 잔존해 온 냉전 구조를 완전히 종식한다는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타협과 협력을 통해 분단구조를 해체할 경우, 미·중 관계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상생 발전하는 공진관계(共進關係, Co-evolutionary Relations)로 진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인권이 유린되고 생존권 위협에 시달려 온 북한 동포의 해방은 전 세계 실패한 국가(Failed States)들에 경종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할 것이다. 남북한 통일과 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은 지구촌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동서양 문명을 유기적으로 융합한 새로운 글로벌 문명공동체(Civilized Community)를 열어가는 역사적 신기원이 될 것이다.

II. 남북한-중국·대만의 분단 지속 원인 평가

한반도 분단 80년,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된 이후 하나의 중국을 지속해서 주장해 온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지 못한 배경에는 내부적 요인과 구조적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냉전 해체 과정에서 전승국들의 협조와 지지 속에 통일을 이룩하였다. 반면 일제 식민지배의 피해국이었던 한반도가 강대국에 의해 분단되어 오늘날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역사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중국도 국공내전으로 갈라졌으나 왜 지금까지 중화민족으로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처방전을 찾아 나서야 한다.

ⓒ EAI 2026

1. 한반도 분단 지속의 내인과 외인

남북통일이 지체되는 가장 큰 원인은 북한 김일성 정권이 한반도를 적화(赤化)하기 위해 도발한 6·25전쟁과 김씨 왕조가 무력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철수하자, 북한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온전한 해방을 부르짖으며 무력 침공을 감행했다.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압록강까지 진격하며 통일을 눈앞에 두었으나, 중공군의 대규모 개입으로 인해 통일의 기회를 놓치고 세계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휴전선을 사이에 둔 채 70년 이상을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정전체제라는 불안정한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중·러·일 등 주변국은 어느 일방이 주도하는 통일한국의 출현을 전략적으로 견제하며, 현상 유지(Status Quo)를 선호해 온 점도 분단이 지속된 주요한 요인이다. 물론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유엔과 평화협정 당사자 간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53년 열린 제7차 유엔총회는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전협정 제60조[7]에 명시한 정치회담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1954년 4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협의하기 위한 정치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제네바 정치회담은 외국군 철수 및 정치체제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7월 21일 결렬되어 한반도 문제는 다시 유엔으로 환원되었다.

이후 평화협정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이 1997년부터 1999년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6차례 개최되었으나,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평화체제와 동맹 간 관계 등에 대한 관련국 간 입장 차이로 결렬되었다. 또한 2005-2008년에는 남·북·미·중·일·러

[7] "한국전쟁 정전협정문," https://ko.wikisource.org/wiki/한국전쟁_정전협정문 (검색일: 2026. 7. 6): 정전협정 제 60 조: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 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 EAI 2026

6자회담이 추진되었다. 2005년의 9·19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함께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8년 말 북한 측이 북핵 사찰단의 재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6자회담이 결렬되었고, 결국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협상은 착수하지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8]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북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을 해왔으나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제재 무용론을 들고 나와 스스로 유엔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 만큼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한반도 통일을 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결집된 의지가 부족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주어진 해방 뒤에 찾아온 분단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면은 없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9] 분단 80년 동안 한국은 자유민주 선진국, 경제·기술 강국, 군사력 세계 5위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통일이 될 경우 우리가 이룩해 놓은 번영과 업적이 잠식될 수 있다는 생각에 통일을 멀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 왕정국가로서, 강성대국을 표방하며 온통 핵·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에 집중한 나머지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폐쇄적 고립국가로 전락하였다. 북한은 남북한 간의 국력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짐에 따라 남한에 흡수통일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분단을 영속화하려는 방어적 기제로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다.

---

[8] 정경영, “통일외교안보 추진전략,” 한국글로벌피스재단 AKU 교수협회 편, 『남북통합 추진전략』(서울: GDC 미디어, 2024), p.150.

[9] 강원택·김성경·마상윤·조동호, 『분단 80 년, 통일을 위한 성찰』(서울: 21 세기북스, 2026).

ⓒ EAI 2026

〈표 3〉 남북한 국력 비교

구분	한국	북한	비율/비고
GDP	1조 8,465억 달러 (세계 13위)	400억 달러 (세계 138위)	46 : 1
GNI	3만 7,670달러	1,700달러	22 : 1
무역	1조 3,412억 달러 (수출 7,093억, 수입 6,319억)	32억 5천만 달러 (수출 2억 8천, 수입 29억 7천)	413 : 1
인구	51,609,121명	26,014,191명	2 : 1
군병력	45만 명	128만 명	1 : 2.8
국방비	460억 달러	90억 달러	5 : 1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5* (2025);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World Factbook 2025-2026* (Washington, D.C: Skyhorse Publishing, 2025), p.499; 통일부 북한정보포탈, "남북한비교통계," https://nkinfo.uni korea.go.kr/nkp/stats/openapi/kosisView.do?menuId= NKSTA TS1159&statsTy=19 (검색일: 2026. 6. 14);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K-stat, "2025년 무역현황," https://stat.kita.net/ (검색일: 2026. 6. 14); 대한민국 국방부, 『2022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290; "국군 45만 명, 6년새 11만 명 줄었다…최소 병력 규모도 안 돼 ," 《중앙일보》, 2025년 8월 11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 원 확정," 2025. 12. 5.

물론 1990년대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통일로 성큼 다가서기도 하였으며 2001년 최초의 남북정상 간 6.15공동성명을 통해 남북관계는 자주적 통일추진, 인도적 문제 해결, 경제·사회·문화 협력, 당국간 대화추진으로 통일의 여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으로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 2017년

ⓒ EAI 2026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화해 협력의 물꼬가 되어 남북정상간 만나고 북미정상회담까지 발전되었으나,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모든 채널이 막히는 상황으로 까지 악화되었고 여전히 북한의 핵미사일은 남북관계 발전을 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분단된 한반도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지, 일관된 통일정책,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 북핵 및 미사일 문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었다.

2. 중국·대만 분단 지속의 결정적 요인

한편,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지 못한 결정적 배경에는 대만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과 일본 등의 강력한 개입 및 저지 전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양안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였으나, 2010년 G2로 부상한 이후 통일을 위해 무력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대만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안보축이자 반도체 등 글로벌 첨단 산업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한 요충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은 기존의 동북아 지정학적 세력 균형을 재편하려는 중국의 어떠한 일방적 시도도 용납할 수 없게 되었고, 중국의 대만 통일을 저지하는 거대한 전략적 방어벽을 형성함에 따라 양안의 분단이 장기화되고 있다.

ⓒ EAI 2026

〈표 4〉 중국 vs 대만 국력 비교

구분	중국	대만	비교
GDP	18조 5,000억 달러 (세계 2위)	7,600억 달러 (세계 21위)	24 : 1
GNI	13,000 달러	32,500 달러	1 : 2.5
무역	약 6조 달러 (세계 1위 교역국)	9,000억 달러 내외	제조업 vs 첨단 IT/반도체
인구	14억 1,000만 명	2,390만 명	59 : 1
국방비	2,250억 ~ 2,900억 달러	190억 ~ 200억 달러	12~14 : 1
상비군	200만 명 (세계 1위 수준)	약 17만 명	12 : 1
반도체 산업	파운드리/제조 분야 확장 중 (점유율 약 7~10%)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60% 이상 (TSMC 등)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5* (2025);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World Factbook 2025-2026* (Washington, D.C: Skyhorse Publishing, 2025),

중국·대만통일 문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면서 대만 통일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자유민주 기술강국으로서 위상 측면에서 볼 때, 국제문제이다. 따라서 중국·대만의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없이 해결될 수 없다.

ⓒ EAI 2026

III. 독일·예멘·베트남의 통일 사례 분석과 시사점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일 사례는 분단 극복의 다양한 경로를 보여주는 역사적 거울이자, 오늘날 남북한과 중국·대만의 통일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1. 독일: 상호신뢰 구축과·국제협력을 통한 통일

독일 통일은 서독의 일관된 동방정책과 지속적인 교류협력, 그리고 영국, 프랑스, 소련의 우려와 반대를 적극적인 지지로 전환시킨 통일외교가 결실을 본 사례이다. 동서독이 소련의 붕괴와 동구권 체제 전환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기를 잘 활용한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게르만 민족의 강렬한 통일 의지와 동독 주민들이 보여준 자발적인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 선택이 통일로 이어졌다.[10]

독일의 사례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상호 신뢰 구축과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외교 역량이 필수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2. 예멘: 선(先)합의 후(後) 내전형 통일

예멘 통일은 외세의 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남북 예멘 간 극적인 정치적 합의로 출발했다. 그러나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권력 배분과 군대 통합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결국 1994년, 경제적·군사적 우위에 있던 북예멘이 분리 독립을 시도한 남예멘의 반란을

[10] Bernd Oettinghause 외 80 여 명 저, 김원원 옮김, 『독일 통일, 자유와 화합의 기적』(서울: 국민북스, 2019); 김동명,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 EAI 2026

무력으로 제압하고 재통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내전 비용과 인명 피해를 치른 후 온전한 통일이 되었다.[11]

이는 경제적 교류협력과 사회문화적 통합이 선행되지 않은 채, 지도자 간의 정치적 합의에만 의존한 성급한 평화통일이 얼마나 취약하며 언제든 잔혹한 내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반면교사이다.

3. 베트남: 파리평화협정 유린 무력 통일

베트남 통일은 베트남전을 종식한 1973년 파리평화협정 체결 이후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이 철수하면서 남베트남에 힘의 진공상태가 발생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협정 이행을 강제하고 감시할 국제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북베트남은 평화협정을 유린하고 무기력한 남베트남에 전면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해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을 함락시켰다.[12]

베트남의 사례는 남북 베트남 간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담보 장치가 없는 평화협정은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없으며, 무력 통일을 예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종합적 시사점: 남북한과 중국·대만 통일에 주는 교훈

독일, 예멘, 베트남 통일사례에서 남북한과 중국·대만통일에 주는 시사점은 엄중하다.

---

[11] 박성기, "분단국 통일·통합사례연구," 한국글로벌피스재단 AKU 교수협회 편, 『남북통합 추진전략』(서울: GDC Media, 2024), pp.583-585

[12] 정경영·오흥국·장삼열·정지용·최용호, 『자립안보와 평화체제 추진전략: 한미동맹과 베트남통일 교훈을 중심으로』(서울: 도서출판 KCP7·27, 2018).

ⓒ EAI 2026

첫째, 내전에 의해서 분단된 국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협정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제감시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화유지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분단 국가 간-분단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세력 간 분단국가 통일에 합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경제, 군사, 사회, 문화 통합을 하여 온전한 통일을 이루는 길과 분단된 상태에서 경제교류협력,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사회문화 교류를 어느 정도 통합이 되었을 때 분단국 당사자와 국제적 합의에 의해 통일을 이루어 내는 길이 있다. 전자 보다 후자가 온전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상호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통일외교가 통일을 이루어 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주민과 중국·대만 주민이 자유롭고 번영된 새로운 통일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경제교류협력,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사회 문화교류 등을 이루어 가야 한다. 또한 왜 통일을 해야 되며 어떠한 통일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컨센서스와 통일의지, 통일외교를 통해 지지와 협력을 얻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IV. 한반도 및 중국·대만의 무력통일 시나리오와 최종상태 예측

현재 북한과 중국은 평화 통일 논의를 뒤로 하고 무력 증강에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며 대한민국을 더 이상 동포가 아니며 타도해야 할 주적으로 규정하며,

ⓒ EAI 2026

핵무력정책법[13]을 제정하고 핵무기에 영토완정의 사명을 부여하면서[14] 전술핵부대를 운용하면서 남한 점령을 위한 지휘조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참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해 놓은 상태다.

북한이 통일을 명분으로 무력 침공을 감행할 때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캠프데이비드 정신[15]에 의거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 따라 유엔사 회원국까지 신속하게 참전[16]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오히려 침공한 북한의 승리는 불가능하며, 한·미·일 연합군과 유엔사 18개 회원국(미국 포함)가 합세하여 북한 지역으로 반격함으로서 군사작전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초토화될 것이다.

중국 역시 수시로 항모전단을 전개하여 대만을 포위하는 무력시위를 감행하여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제1도련선(FIC, First Island Chain)을 따라 인도·태평양 거부적 방어선(DDL, Denial Defense Line)[17]을 설정하고, 이를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최전선 방어벽이자 패권 경쟁의 핵심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

[13] "선제타격까지 시사한 '북 핵무력 정책 법령' 실효적 대응책 나올까…한·미간 협의도 본격화," KBS 뉴스, 2022. 9 월 17 일.

[14] "김정은이 말한 '영토 평정'에 숨겨진 두 가지 의도," 『시사 In』, 2024 년 3 월 8 일: 2017 년 11 월 29 일 북한 정부 성명, "북한은 핵과 미사일과 관련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위해 전략무기를 개발했다.

[15] The White House, "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ug 18, 2023: 2023 년 8 월 18 일 한미일 정상은 지역내 도전, 도발, 안보 위협시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하였다.

[16] "한국전쟁 군사정전협정," https://ko.wikipedia.org/wiki/한국_군사_정전_협정 (검색일: 2026. 7. 8): 1953 년 7 월 27 일 정전협정 체결시 유엔사 회원국은 "만약 유엔 원칙에 반한 무력공격이 한반도에서 재발할 경우 다시 단결하여 즉각적으로 이에 대항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유엔사 회원국(덴마아크와 독일 추가되어 18 개국)은 한국에서 유엔사 증원요원이 매년 Freedom Shield 연습에 참가하고 있다; "제 2 회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10 일 서울 개최," 《연합뉴스》, 2024 년 9 월 5 일: 한국은 2023 년부터 매년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다는 슬로건 하에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7] Department of War,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 23, 2026), p.4.

ⓒ EAI 2026

〈그림 1〉 미국의 인도·태평양 거부적 방어선(제1도련선)



출처: Department of War,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 23, 2026, p.4; "First Island Chain Strategy: US Deterrence and China Challenge," https://smallwarsjournal.com/2026/03/18/first-island-chain-us-strategy-china-deterrence (accessed: July 26, 2026); Defense News 재인용, "美 '제 1 도련선이 중심축'…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불가피," 《동아일보》, 2025 년 9 월 30 일.

여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호주까지 연대하여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사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중국이 상당한 군사력을 증강하여 항공모함과 탄도미사일을 앞세운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미국이 이란 침공에서 발휘했던 다영역작전(MDO) 능력을 분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군사작전 경험이 거의 없는 중국이 무모하게 대만 침공을 감행한다면 회복 불능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1. 한반도 전면전의 최종상태(End-State) 예측

만약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개전 90일 이내 북한의 갱도 진지 내 170밀리 자주포 8,800문과 240밀리 방사포 5,500문 등 14,300문의 포병 화력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300km

ⓒ EAI 2026

이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00-1,000km이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1,000-3,000k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3,000-5,500k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5,500km 이상) 등 1,300기 탄도 미사일[18]의 화력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에 극심한 피해를 포함 49만여 명의 한국 전사상자와 5만 2천여 명의 미군 희생이 발생할 것이며, 북한군까지 포함하면 250만 여명의 희생이 예상된다.[19] 특히 북한이 보유한 약 60기의 핵탄두나 생화학무기를 실제로 운용할 경우 그 인명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경제적 충격 역시 파멸적이다. 전쟁 첫해 한국의 GDP는 약 37.5% 위축될 것이며, 글로벌 시장의 D램(41%) 및 낸드플래시(33%) 공급을 주도하는 반도체 생태계가 일시에 마비되어 전 세계 IT 및 자동차 산업이 도미노처럼 붕괴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GDP의 3.9%에 달하는 약 4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며, 중국 GDP는 5%, 미국 GDP는 2.3% 감소하는 대공황이 발생할 것이다. 한미연합군의 압도적인 전략적 반격으로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겠지만, 그 대가로 한반도 전역은 회복 불가능한 폐허가 될 것이다.[20]

2. 중국·대만 무력 충돌의 최종상태 예측

양안 관계 역시 3~4주의 단기결전으로 군사작전이 일단락된다 하더라도, 미·중 양국 모두 수만 명의 사상자와 해·공군 전력의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이 경우 중국은 GDP의 11% 이상, 미국은 6.6%를 잃는 타격을 입는다.[21] 말라카 해협 등 해상 무역로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

[18] 대한민국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p. 27 & 31-32.

[19]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Basic Books, 2001), p.315.

[20] "한반도 전쟁 시 5500 조 피해…"러-우크라 2 배 충격," 《전자신문》, 2024 년 7 월 30 일.

[21] Mark F. Cancian, Matthew Cancian, and Eric Heginbotham,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CSIS, January 9, 2023).

ⓒ EAI 2026

주변국들의 피해도 극심할 것이다. 한국은 23%, 일본은 14.7%라는 GDP 손실을 입으며 전쟁 당사국 못지않은 치명적인 경제적 피탄을 맞게 된다.

특히 최근 발생한 미국의 대(對) 이란 군사작전 사례에서 여실히 목도하듯, 현대전은 국제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 물류망을 마비시키고 인류 문명을 퇴보시키는 대재앙을 초래할 뿐이다.

V. 통일방안 비교평가: 네 가지 경로의 손익과 최종 선택

한반도와 중국·대만이 어떠한 경로와 방안으로 분단을 극복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분단 지속, 무력통일, 시차별 평화통일, 동시 평화통일이라는 네 가지 가상 경로를 비교·평가함으로써 최선의 방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분단 지속(현상 유지) 시나리오: 소모적 비용의 영속화

분단 구조가 현 상태로 지속되는 한, 양 지역은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반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한국 약 2.7%, 북한 약 25%)을 과도하게 국방비[22]로 소모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전쟁의 공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존, 해로 및 항공로의 우회 비용 등으로 민족적 역량을 고갈시키고 있다.

[22]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World Factbook 2025-2026* (Washington, D.C.: Skyhorse Publishing, 2025), pp.497-506.

ⓒ EAI 2026

특히 중국-대만 간 양안 사태가 끊이지 않아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분단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분단이 지속되는 길은 어떠한 경우도 추진할 방책이 아니다.

2. 무력통일 시나리오: 파멸적 공멸

남북한-중국·대만 중 어느 한쪽의 무력침공은 서해를 끼고 있어 동일 전구에서 지역분쟁으로 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나리오 1: 중국의 대만 침공

예컨대 중국이 대만 침공시 다롄의 랴오닝항모와 칭타오에 기지를 둔 산둥함이 반접근지역거부전략을 구사 제1도련선을 장악하게 될 때 서해 해상우세권은 북한 측에서 볼 때는 엄청난 기회의 창이 열려 동일 전구지역에서 이전효과(one theater spillover)와 주한미군의 핵심전력마저 대만으로 유출되는 상황이면 더더욱 북한에게 전면 무력 남침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한반도로 전쟁이 확전된다는 것으로. 북·중·러 對 한·미·일·필리핀·호주가 대립하는 동아시아 분쟁으로 비화되어 중국의 대만 침공은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앙만 초래하게 된다.

시나리오 2: 북한의 한국 침공

역으로 북한이 수많은 탄도미사일로 일본, 오키나와 괌의 미군 증원전력 발진기지를 무력화하면서 전면 무력 남침을 감행할 때 러시아 전투기와 중국의 전투기가 수시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하여 무력시위를 했던 것처럼 실제 한반도를 에워싸면서 미군과 일본군의 한반도 전구작전에 증원을

ⓒ EAI 2026

차단하면서 포위작전을 감행할 것이다. 미군과 일본군 전력이 한반도에 집중되는 것을 역이용하여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려 할 것이다. 한국군은 유엔사 회원국의 참전으로 북한군과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이 사이에 미본토미군, 일본, 필리핀, 호주는 전투력을 집중해서 중국의 침공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는 결국 동아시아 전쟁으로 확전되어 태평양 전쟁 보다 더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나 중국은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승산이 없는 전쟁을 통해 통일하겠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나 중국이 무력으로 통일을 시도할 때, 북·중·러 대 한·미·일·필리핀·호주 간의 전면적인 국제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상황에서 침략자의 승리는커녕, 동북아가 초토화되고 인류 문명의 퇴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무력통일은 군사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제적인 측면이나 도덕적으로도 결코 채택할 수 없는 방안이다.

3. 시차별 평화통일 시나리오: 지정학적 역풍(逆風)의 위험성

평화통일이 유일한 대안임은 자명하나, 남북한과 중국·대만이 시차를 두고 어느 한쪽이 먼저 평화통일을 달성할 때 발생하는 내재적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

시나리오 1: 한반도 선(先) 평화통일

한반도 통일이 먼저 이루어질 경우, 해양 세력의 한반도 진출에 민감한 중국은 통일 조급증에 사로잡혀, 대만 무력통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EAI 2026

시나리오 2: 중국·대만 선(先) 평화통일

중국·대만 통일이 먼저 이루어질 경우, 통일중국으로 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배후 후원세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북한 정권은 체제 위기감 속에서 핵 선제타격이라는 모험주의적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무력통일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남북한-중국·대만 어느 한쪽의 평화통일은 지정학적 전이(Spill-over)로 다른 한쪽의 군사적 폭주를 유발하고, 이어서 먼저 이루어 놓은 평화통일마저 다시금 전쟁과 내란의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4. 동시 평화통일 시나리오: 구조적 해법

결론적으로 분단 지속도, 무력통일도, 시차를 둔 순차적 평화통일도 동북아의 완전한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남북한-중국·대만 통일의 지정학적 연동성의 딜레마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책은 남북한과 중국·대만이 상호 긴밀한 전략적 조율 하에 동시에 평화통일을 추진·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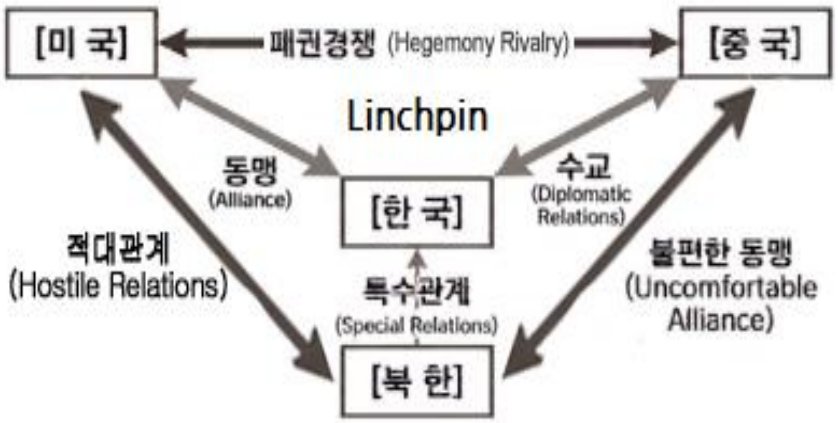
ⓒ EAI 2026

VI. 남북한과 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 추진 전략

이 원대한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설계된 마스터플랜이 요구된다.

과연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인가? 남·북·미·중의 복잡한 역학 구도 속에서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핵심 국가는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림 2〉 남·북·미·중 역학구도와 한국의 역할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 1953년 10월 1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굳건한 동맹관계이며, 중국과는 1992년 8월 24일 국교를 수립한 외교 파트너이다. 아울러 북한과는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 관계에 있고, 미국과 북한은 수교조차 맺지 않은 적대적 대치관계이다. 중국과 북한은 조·중 우호협력조약을 맺은 동맹이나 불편한 동맹관계이며, 북한은 러시아와 협력 관계이나,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와 고립되어 있다.

ⓒ EAI 2026

한국이 가진 네트워크 자산을 활용하여 린치핀 역할을 할 수 있다. 미·중·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여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 그랜드 바게인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1. 대(對) 미국 전략: 방위비 절감과 인·태 전략 방위선의 안정적 확보

미국을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의 지지자로 설득하는 핵심 논거는 전략적 부담의 획기적 경감과 인도·태평양 전략방위선의 안정적 확보이다. 통일 한반도가 결코 반미(反美) 노선을 걷지 않고 확고한 친미·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지위와 임무는 북한 위협관리에서 한반도 평화유지와 지역 안정자 역할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 분단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의 세력 투사를 차단할 수 있는 일본-통일한반도-오키나와-필리핀-남중국해로 이어지는 인도·태평양 전략방위선을 한층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 대(對) 중국 전략: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안보 딜레마 해소와 평화적 양안 통합

중국의 가장 큰 전략적 우려는 한반도 통일 이후 압록강 국경선에 미군 기지가 전진 배치되는 것이다. 남·북·미·중 간 4자 한반도 평화조약을 통해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 평화유지군임을 조약으로 담보한다.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주둔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 동북아 안정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일한국의 급진적 핵무장이나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함으로써 중국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EAI 2026

동시에 미국과 한국, 북한이 중국의 1국 2체제 단계적 통일[23]을 지지하여 평화통일을 이루어 낸다면, 건국이래 최대 숙원인 하나의 중국을 군사적 희생 없이 달성하게 된다. 이러한 대타협은 동북아를 힘의 대결 구도에서 다자간 상생과 협력적 안보 체제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3. 대(對) 북한 전략: 체제 안전의 제도화와 경제적 연착륙 보장

북한 정권을 설득하는 핵심 키워드는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 해소와 과도기적 체제의 독자성 인정이다. 미국과 중국, 남북한이 국제법적으로 보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한편, 군사정전위원회를 유엔이 참여하는 국제평화감시기구로 개편하여 북한의 체제 안전을 확실히 보장한다. 또한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여 계속 주둔한다. 이는 북한이 평화조약을 유린하여 남침을 못하도록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조치이다. 이 구도 하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다.

북한은 평화조약을 통해서 체제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북핵을 완전 폐기하고, 대북 제재 전면 해제, 북미 및 북일 수교, 국방비의 민생경제 전환, 한국, 중국, 미국은 물론 World Bank, ADD, AIIB도 경제개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

[23] Richard C. Bush, 박행용·이용빈 옮김, 『벼랑 끝에 선 타이완: 미중 경쟁과 양안관계의 국제정치』(파주: 한울아카데미, 2023), pp.181-211.

ⓒ EAI 2026

VII.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을 위한 4단계 추진 로드맵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지경학적·지정학적 판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만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담합에 의해 희생되는 우를 예방할 수 있다.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4단계 추진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한·미·일 내부 조율 및 주한미군의 안정자 역할 정립

비핵 자유 평화 번영의 새로운 통일한국을 지향하고 있음을 미국 및 일본과 명확히 공유한다. 한·미·일 정상이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서밋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공식 천명[24]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으로 주둔하는 것을 합의한다.

2단계: 남북한-중국·대만 대타협(Grand Bargain) 및 동시 평화통일 공식 제안

한국은 북한, 미국, 중국 개별 실무협상을 통해 남·북·미·중 정상 간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한국 정부가 UN 총회에서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공식 발의한다.

3단계: 2+2 투트랙(Two-Track) 다자 회담 및 한반도 평화협정-중국·대만 1국 2체제통일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중국·대만 1국 2체제 동시 평화통일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조약 협의 채널과 중국·대만 간 1국 2체제 통일 채널을 유기적으로 가동시켜 협의한다. 미·중 양국이 합의

[24] The White House, "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ug 18, 2023.

ⓒ EAI 2026

사항을 상호 교차 보증(cross-guarantee)하고 남북한-중국·대만 평화통일 동시 발효 조항(simultaneous effective clause)을 명시하여 남북한-대만 평화통일 조약을 체결한다.

4단계: 동북아 안보레짐 창설 및 통일한국-통일중국의 연착륙

통일한국, 통일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 안보레짐(North East Asia Security Regime)을 제도화함으로써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체제를 확고히 안착시킨다.

통일한국과 통일중국이 온전한 통일국가로 뿌리 내리고, 역내의 군비경쟁, 영토분쟁, 대규모 재해재난 등 복합 안보 이슈를 상시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안보협의체의 제도적 아키텍처 구축이 필수적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동북아 국가 정상회담을 최상위 기구로 두고, 장관급 협의체인 전략대화, 실무 기구로서 안보경제협력위원회와 신뢰구축위원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국을 운영한다. 서울에 운용하고 있는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을 모체로 동북아 안보협력레짐 사무국으로 증편한다.

〈그림 3〉 동북아 안보협력 아키텍처



출처: Chung Kyung-young, "Building a Military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Feasibility and Design,"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aryland (2005), p.347.

ⓒ EAI 2026

VIII. 결론 및 정책 제안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없이는 대만 해협의 항구적 안정을 찾을 수 없고, 대만 해협의 평화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역시 담보할 수 없다. 남북한과 중국·대만은 동일 전구(戰區)내라는 지정학적 연동성을 간파하고,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을 통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역사가 말해주듯 한반도는 강대국 정치의 현장이었다. 일본은 1592년 명나라를 정벌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공하였고, 청은 1636년 병자호란을 일으켰으며, 청일전쟁이 1894년 한반도에서 발발하였고, 러일전쟁이 1904년 대한해협과 서해지역에서 일어났으며, 급기야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하면서 1937년 만주사변과 1941년 중국 대륙을 침공하였고,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미국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으며, 소련의 사주에 의해 김일성이 한국을 침략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헤게모니 쟁탈전이 있었음을 직시하여 통일 이후 패권국 간의 무력충돌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동북아의 세력균형자 및 지역안정자 역할로 전환시키고, 정전협정을 이행 관리했던 군사정전위원회를 전환하여 평화조약을 이행 관리하는 유엔감시기구로 증편하여 한반도 평화체제가 온전한 통일을 일궈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미·중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의 비전(A New Vision for the Constructive Bilateral

ⓒ EAI 2026

Relations of Strategic Stability)[25]은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 담론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일체의 외세 개입 배격을 주장하면서 수시로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훈련을 해왔다. 이는 통일을 위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겠다는 의지로 국제사회는 읽힌다. 미-이란전쟁을 보면서 무력으로 국가전략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며 무모한 것인가를 느끼고 있다. 중국의 일부 엘리트가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이 초래할 파멸적 위험성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에 전향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 전략은 평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미·중·남·북 간의 거대한 대타협(Grand Bargain)에 의해 북한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북한 역시 거부할 명분이 없다.

남·북·미·중의 지도자들이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이라는 대의(大義)에 합의하여 자유롭고 번영된 새로운 통일 한국과 통일 중국으로 거듭날 때, 동북아의 냉전을 종식하고 인류 평화에 기여한 지도자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남·북·미·중 정상의 용단을 기대한다. ■

[25] "China and the U.S. Agreed to 'Strategic Stability' in Beijing,"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18, 2026; "New Vision for Constructive Relationship of Strategic Stability should Guide Sino-US ties," *China Daily.COM.CN,* May 14, 2026.

ⓒ EAI 2026

참고문헌

단행본

대한민국 국방부, 『2022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3).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4).

정경영, “통일외교안보 추진전략,” 한국글로벌피스재단 AKU교수협회 편, 『남북통합 추진전략』(서울: GDC 미디어, 2024).

Bush, Richard C., 박행용·이용빈 옮김, 『벼랑 끝에 선 타이완: 미중 경쟁과 양안관계의 국제정치』(파주: 한울아카데미, 2023).

Cancian, Mark F., Matthew Cancian, and Eric Heginbotham,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CSIS, January 9, 2023).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World Factbook 2025-2026* (Washington, D.C.: Skyhorse Publishing, 2025).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5* (2025).

논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 원 확정,” 2025. 12. 5.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Part I),”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Commodities and Strategy Research,* Global Economics Paper No.188.

Chung, Kyung-young, "Building a Military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Feasibility and Design,"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aryland (2005).

The White House, “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ug 18, 2023.

ⓒ EAI 2026

신문 및 인터넷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K-stat, “2025년 무역현황,” https://stat.kita.net/, (검색일: 2026. 6. 14).

“국군 45만 명, 6년새 11만 명 줄었다…최소 병력 규모도 안 돼,” 《중앙일보》, 2025년 8월 11일.

“美 ‘제1 도련선이 중심축’…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불가피,” 《동아일보》, 2025년 9월 30일.

“제2회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10일 서울 개최,” 《연합뉴스》, 2024년 9월 5일.

통일부 북한정보포탈, “남북한비교통계,” https://nkinfo.unikorea.go.kr/nkp/stats/openapi/kosisView.do?menuI d=NKSTATS1159&statsTy=19 (검색일: 2026. 6. 14).

“한국전쟁 정전협정문,” https://ko.wikisource.org/wiki/한국전쟁_정전협정문 (검색일: 2026. 7. 6).

“한반도 전쟁 시 5500조 피해…“러-우크라 2배 충격,” 《전자신문》, 2024년 7월 30일.

“China and the U.S. Agreed to ‘Strategic Stability’ in Beijing,”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18, 2026.

“First Island Chain Strategy: US Deterrence and China Challenge,” https://smallwarsjournal.com/2026/03/18/first-island-chain-us-strategy-china-deterrence (accessed: July 26, 2026);

“Goldman Sachs: GDP of “United Korea” Will Outpace Those of Japan, Germany, and France in 2050,“ *Maeil Business News*, Sep 22, 2009.

“New Vision for Constructive Relationship of Strategic Stability should Guide Sino-US ties,“ *China Daily.COM.CN,* May 14, 2026.

“UN agency upgrades Korea's status to developed economy,” *Koea Net*, July 5, 2021.

ⓒ EAI 2026

■ 저자: **정경영**_한국통일국제워킹그룹 공동의장 · 前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_EAI 연구원; **오인환**_EAI 수석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11) | leesj@eai.or.kr

본 논평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발행일 2026년 7월 28일 979-11-7584-128-4 95340
"남북한과 중국·대만의 동시 평화통일 가능성과 추진전략: 동일 전구(戰區)내 지정학 연계론을 바탕으로"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 EAI 2026